

2014년 들어서도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월31일 여수시 원유2부두에서는 원유 운반선이 송유관을 들이받아 원유 및 나프타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2월6일에는 GS칼텍스의 BTX 제조공정에서 수소가 첨가된 화합물질이 배관 이음매에서 새어나오면서 화재가 일어나 가동을 중단했다. 부산에서도 대형 화물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돌풍이 불어 연료가 대항 누출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화의 여수 화약창고에서도 2월5일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2월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현장을 감식하던 중 또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2명이 부상을 입었다. 2월13일에는 빙그레의 남양주 제2공장에서 액화질소 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암모니아 6톤이 누출됐고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에도 삼성정밀화학을 비롯해 화학 및 관련기업에서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화학사고가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사고를 줄이기 위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 석유화학단지지는 건설된 지 50년에 달하고 여수단지도 40년이 넘었으며 대산단지 또한 30년이 훌러 화학설비 및 배관이 노후화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인천 남동공단이나 반월·시화공단, 지방의 소규모 공단을 포함하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강화해 입법에 나선 것도 화학물질 누출 및 폭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대한 대응이었으나, 경제·산업단체 및 청와대의 압력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무력화 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학사고는 발생할 당시의 피해도 크려니와 이후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다니는 것이 문제로, 선진국들이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어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해당기업 차원에서도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강력한 예방 및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화학사고를 방치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수 유조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낙포동 지역에서 정상 수준의 50배에 달하는 벤젠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발표했을 정도이다.

국내 화학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영업이익률이 3% 수준에 머물렀으나 최근에는 4-6%에 달하고 있고 호황일 때는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평법이나 화관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업살이라는 증거로,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써야 할 비용이 영업이익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화학기업 영업이익률의 비밀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